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김 사 현**

◀ 요약 ▶

이 연구는 제도주의 관점에서 복지제도의 수급경험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특수적 목적과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수급자들의 인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이중차이 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수급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주의 이론, 특히 복지수혜론이 한국사회에서도 현실 적합성을 가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인식은 장기수급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인식의 변화를 제도적 이해관계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으며(NRF-2011-330-B00143), 제4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sahyun@deagu.ac.kr)

주제어: 복지인식, 복지태도, 노인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프로그램특수적 목적, 일반적 목적, 이중차이, 성향매칭

1. 서론

이 연구는 제도주의 관점에서 복지제도의 수급경험이 복지정책에 대한 수급자들의 인식을 실제로 변화시키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경험적인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수급자들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 및 축소를 설명하는 제도주의 이론이 한국사회에서 현실 적합성을 지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제도주의 이론은 복지수급의 지위를 가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국가 혹은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안상훈, 2000; Pierson, 1996; Svallfors, 1997). 이는 자기이해(self-interest)적 관점에서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받게 되는 혜택이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제도주의 이론에 강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연구들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아직까지 복지제도 수급에 따른 복지인식의 차이가 경험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제도 수급여부에 따라 복지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주은선·백정미, 2007), 여전히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류진석, 2004; 김영순·여유진, 2008; 김사현·홍경준, 2010; 김사현, 2010(b)). 이러한 분석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하게 다음의 두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 시점에서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비교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산출되는 복지인식에 대한 자료들은 최근까지 반복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급여부에 대한 복지인식의 비교는 주로 단일 시점에서 다루어졌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초기값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과 더불어, 복지인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영향들이 모두 배제된 순수한 수급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복지인식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복지인식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총체적(holistic approach)인 것으로, 예컨대 재분배나 불평 등에 대한 정부역할 등과 같은 복지정책의 일반화된 목적들이며,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특수적(program-specific approach)인 것으로 개별 사회보장제도들의 고유한 목적에 대한 정책지지나 평가 등에 관한 것이다(김사현, 2010(a)).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이해적 관계가 다소 명백한 쪽은 후자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특수적으로 접근할 경우 복지인식에 있어 수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에 반해, 전자의 경우는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로 양산되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나 사회규범(social norm)이란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¹⁾. 왜냐 하면, 수급경험이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근거를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제도의 이러한 효과들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과(經過)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이를 이론적 혹은 방법론적으로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었으며, 따라서 제도효과가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문제들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적어도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복지제도의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복지제도 수급경험을 특별히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한정하였다. 이처럼 노인복지서비스에 한정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들의 복지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도주의 관점에서 노인은 복지수급자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주의 이론의 현실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김사현, 2010(b)). 이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들의 수급효과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제도주의 이론의 한국 적합성을 재평가해보기 위

¹⁾ 일례로 복지국가에 대한 축소정치를 강조하는 폴 피어슨(Paul Pierson)도 제도의 경로의존을 낳는 정책피드백 효과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나는 복지프로그램이 자원을 분배하고 유인동기를 창출하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주는 학습효과이다(Pierson, 2006: 102-126).

함이다. 둘째는 수급에 대한 논란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함이다. 노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연금과 노인복지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 중 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여부를 분리하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노인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복지제도 수급경험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인식 변화를 파악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제도의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에 있어, 특별히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일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노인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다.

2. 복지제도 수급경험과 복지인식

1) 복지인식(welfare perception)

복지국가의 발전 및 축소와 관련해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선택이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구성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나 태도, 혹은 인식의 구조적 특성들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그만큼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러 연구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용어와 개념에 혼란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복지인식(welfare perception), 복지태도(welfare attitude),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 여론(public opinion) 등과 같은 용어들은 모두 사회구성원들이 복지정책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의견들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아마도 심리 혹은 사회심리학에서 이들에 대한 개념적 분별이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정책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것인지는 연구자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추상적 개념들을 수량화하는 경우 그 미묘한 차이를 측정에서 분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²⁾. 오히려 정

²⁾ 실제로, 측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세심히 고려되는 것 같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개념을 세밀하게

작 이론적·경험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식이나 태도의 대상(object), 즉 ‘무엇(what)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인지를 분별하는 것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인식이나 태도가 ‘어떤 실체(entity)에 대한 평가적 반응’(Rokeach, 1970; Olson and Zanna, 1993)이기에, 그 어떤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매우 다른 반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류진석, 2004; 김사현, 2010(a)). 이런 점에서 무엇에 대한 복지인식을 다룰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사회정책에서 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관련하여,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두 가지 접근방식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김사현, 2010(a)). 먼저, 일반적인 수준에서 소득 보장 및 재분배에 대한 정부책임성, 사회정의 등을 다루는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다. 주지하듯이,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론(crisis theory)의 확산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문제를 불러왔다(O'Connor, 1973; Gough, 1990). 이로 인해 정부역할(role of government)과 개입수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여파로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Couglin, 1980; Talyor-Gooby, 1985; Hasenfeld and Rafferty, 1989 등). 다만, 당시의 주요 관심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있었기에 복지인식에 대한 주제들 역시, 예컨대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목적과 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다른 한편에서는 프로그램특수적 접근(program-specific approach)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는 특정한 사회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련된 복지인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제도와 프로그램의 고유한 목적에 더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세계적인 복지국가의 보수주의화에 대응해 자본주의 자체보다는 복지국가 문제에 더 관심이 집중되면서(Talyor-Gooby, 1985: 13-14), 특정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문제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이해관계가 강조되는 ‘축소의 정치’나 ‘새로운 정치(new politics)’, 혹은 ‘복지정치(welfare politics)’가 등장하게 되었다(안상훈, 2000; Pierson, 1996). 제도주의 관점이 복지국가 연구에서 주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하나의 복지정책에 대해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즉, 프로그램특수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

구별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에 부합하는 ‘복지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들에서 강조되듯이 개별 위험이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하나라면, 또 다른 하나는 총체적 접근에서 강조되는 사회 전체의 분배를 개선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지속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한 가지 추론 가능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 두 가지 목적 혹은 기능을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복지정책의 목적을 둘러싼 고전적인 ‘보장(security) 對 평등(equality)’ 논쟁, 즉 복지국가의 목적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일 뿐, 복지프로그램이 기능적으로는 재분배를 통해 평등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목적 자체는 평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관점(Wilensky, 1975)과 복지국가의 발전정도를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 개선정도로 보는 관점(Korpi, 1983)에 차이가 있듯이, 사람들 역시 이 두 가지를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는 여러 요인들이 - 본 연구에서 특히 제도적 요인을 다루듯이 -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이 둘을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복지제도 수급경험과 복지인식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된다(김사현, 2010(b); Hasenfeld and Rafferty, 1989; Papadakis, 1992; Jæger, 2006). 하나는 자기이해(self-interest)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식이나 선호가 형성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관적 인식(subjective perception)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이익과는 별개로 학습이나 규범이 인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복지인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경쟁적인 두 이론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고 있다. 우선 계급정치를 강조하는 계급론은 기본적으로 복지제도 자체가 노동계급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계급이 친복지적일 것으로 본다. 더불어 계급정치의 토대가 객관적인 계급적 지위만이 아닌, 여러 계급의 ‘정치적 절합(political articulation)’에 있다는 측면에서 주관적 계급의식이 강조되기도 한다(Korpi, 1983; Bean and Papadakis, 1998; Svallfors, 2006: 21). 따라서 계급론은 자기이해와 주관적 인식을 모두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론은 전통적인 계급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여러 비판에 직면하

게 되었다. 특히, 중간계급의 발전은 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수혜성(welfare clientele)’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는 집단과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을 구분하고, 수혜집단이 복지정책을 더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할 것으로 보는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복지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이나, 그것에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보다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복지제도의 수혜여부가 정책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들은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양산되었기 때문에, 복지국가 축소 혹은 재편의 시기는 계급정치로 대변되는 ‘구정치(old politics)’가 복지수혜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new politics)’로 대체될 것이라 본다(안상훈, 2000; Pierson, 1996).

계급정치를 대체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론의 등장이 복지제도를 새롭게 보고, 이를 통해 복지제도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인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복지인식과 관련해 계급정치론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론적·경험적 문제들이 이 이론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중 하나는 복지제도의 종류에 따라 수급의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제도별로 수급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의 양상도 제도별로 다를 수 있으며, 그 결과 한 사회의 복지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목적, 예컨대 재분배(소득격차해소)와 같은 정책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을 이론적으로, 특히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복지정책의 일반적 목적을 수급지위와 연결 짓고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계급지위와 달리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들의 수급지위는 사실 변화가 거의 없지만, 이와 달리 공공부조나 실업, 사회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들의 경우 수급지위가 항상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수급과 비수급이란 지위를 넘나들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위변화에 따라 항상 복지인식도 동시에 변한다고 할 것인가? 자기이해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겠지만, 사실 인식

이나 태도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또 다른 산물로 강조되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나 사회규범(social norm)은 복지인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수급경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켰으면 수급지위가 변하여도 인식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인 수급과정에서 복지정책의 목적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고, 그것이 규범으로 내면화되면서 일반적인 인식도 변해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제도 수급경험이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목적과 관련된 인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입장에 기초해,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복지정책의 목적에 대한 인식에 복지제도 장단기적 수급경험이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3. 분석전략

1)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이중차이법

복지제도 수급경험에 따른 복지인식의 변화는 일종의 정책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 특히 사회적 효과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급에 따른 복지인식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좋은 분석방법이 될 수 있다.

관련하여, 사회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더미변수로 두고, 이것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회귀 분석 모형을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이때 성과에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함께 투입되는데, 이는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대한 난선회(randomization)가 불가능한 비실험적 상황에서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가능한 통제해 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식이 순수한 프로그램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모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는 전제(Ceteris Paribus)’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문제

점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컨대,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에 초기값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그 효과가 통제되기 어렵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output)간에 관찰되지 않는 제3의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내생성 문제로 인한 편의추정을 불러올 수 있다³⁾. 실제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으로 초래되는 복지인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작업에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히 해결되어야 노인복지서비스 수급의 순수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간단히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i)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있는 집단, 곧 실험집단을 관찰자료를 통해 선별 하였다. ii) PSM을 통해 수급경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선별하였다. iii)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 후에 측정된 복지인식을 활용하여 이 두 집단에 이중차이법을 적용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아래에서는 활용된 자료를 비롯해,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의 선별과정, 그리고 이중차이법으로 효과를 파악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및 대상

위에서 언급한 분석법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조사된 자료가 필요하다. 하나는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확인되어야 하고, 둘째는 그들의 복지인식이 측정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중차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인식이 서비스 수급 전과 수급 후에 반복적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³⁾ 물론, 이 경우 도구변수를 활용할 수 있으나 도구변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⁴⁾ 성향점수 추정법과 이중차이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이미 많은 자료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 여기서는 지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관심이 있는 연구자는 Guo and Fraser(2010), Khandker, Koolwal, and Samad(2010)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는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 활용되기 적합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매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의 조사대상자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수급경험을 묻고 있으며, 특히 2차년도와 5년도 부가조사는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에 5개 년도에 걸친 한국복지패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 중 복지인식설문에 응답한 노인들이 분석대상으로 설정되었다.

3)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설정

(1) 관찰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기본적으로 실험집단은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다. 한국복지패널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보조아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12개 종류의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지원, 노인무료급식, 물품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방문가정 및 간병서비스, 이동편의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교육서비스가 포함된다. 본 연구는 이들 중 당해에 하나의 서비스라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당해의 수급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집단은 두 개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하나는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집단(실험집단1)이며, 다른 하나는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집단(실험집단2)이다. 이렇게 실험집단을 두 개로 설정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복지인식에 대한 장기수급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1은 복지인식이 최초 측정된 2007년까지 노인복지서비스를 수급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수급을 한 번이라도 받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뒤에서 언급할 이종차이법을 엄밀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다만, 수급경험의 확인에는 시차(time lag)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다. 실험집단2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수급하고 있는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비교집단은 노인복지 수급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실험집단1과 2,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실험 및 비교집단 설정방식은 간략히 아래 [표 1]로 정리될 수 있다.

[표 1] 실험 및 비교집단 선정방법

| 조사시점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실험집단1 | × | × | × | ○ | ○ |
| 실험집단2 | ○ | ○ | ○ | ○ | ○ |
| 비교집단 | × | × | × | × | × |
| 제외집단 | 실험집단1, 실험집단2, 비교집단이 아닌 경우 | | | | |
| 복지인식조사 | - | 1차 조사 | - | - | 2차 조사 |

주: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 수급비경험(×)

(2) 매칭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PSM은 자료에서 관찰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바탕으로 분석에 포함될 실험 및 비교집단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설정함으로써, 실험설계에서와 같이 두 집단 간에 처리(treatment)와 다른 속성들을 가능한 동일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은 노인복지서비스 수급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해 수급여부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확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PSM을 활용한 실험 및 비교집단의 재설정에는 수급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들로 어떤 것들을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는 노인의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을 성향점수추정을 위한 예측변수들로 활용하였다. 이는 Andersen and Newman(1973)이 제시한 행동주의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선행요인은 노인의 성과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며, 가능성요인은 서비스 접근의 가능성을, 욕구요인은 서비스의 필요성을 각각 반영한다(임연옥·윤현숙, 2009).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에 기초해 노인의 성

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더불어, 가능성 요인으로써 혼인상태(혼인 vs. 비혼)와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욕구요인으로 건강상태(5점)를 대리변수로 선택하였다.

4) 복지인식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측정되었다. 첫째는 프로그램 특수적(program-specific)인 지표로, 노인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지인식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성하였는데, 하나는 해당 정책에 대한 정부역할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역할은 ‘노인생활지원을 위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하는지 혹은 줄여야 하는지’로 측정되었으며, 정책평가는 ‘노인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로 설정하였다.

이와 달리 총체적(holistic)인 복지인식은 좀 더 일반화된 방식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복지국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소득재분배와 성장-분배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각각을 ‘소득격차 해소는 정부책임이다’, ‘성장과 분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식은 아래의 [표 2]에 언급되어 있다.

5) 통제변수

복지제도의 수급여부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효과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연구들에서 복지인식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많이 언급되는 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 교육수준, 고용지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김사현 · 홍경준, 2010). 이들에 대한 자세한 측정방식 역시 아래의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변수정의

| 변 수 | | 조작정의 및 측정 | |
|-------|-----------|--|--|
| 복지 인식 | 노인복지 관련인식 | 정부역할 | 노인생활지원을 위한 정부지출 (① 훨씬 덜 지출 ~ ⑤ 훨씬 더 지출) |
| | | 정책평가 | 노인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정부정책 평가 (① 매우 못함 ~ ⑤ 매우 잘함) |
| | 일반복지 정책인식 | 소득격차 해소 | 소득격차 해소는 정부책임이다 (① 매우 반대 ~ ⑤ 매우 동의) |
| | | 성장 vs. 분배 | 성장과 분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① 성장만 중요 ~ ④ 분배만 중요) |
| 설명 변수 | 수급경험 | 지난 1지난 1년간 다음 12개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노인무료급식, 물품, 가정봉사, 식사배달, 방문간호·간병, 이동편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교육서비스 | |
| 통제 변수 | 성별 | 남성(0), 여성(1) | |
| | 연령 | 만나이 | |
| | 지역 | 서울(1), 수도권(2), 부산·경남·울산(3), 대구·경북(4), 대전·충남(5), 강원·충북(6), 광주·전남·전북·제주(7) | |
| | 교육수준 | 교육년수(0 ~ 20) | |
| | 소득수준 | 시장소득(자연대수) | |
| | 고용지위 | 상용직(1), 임시·일용직(2), 고용주(3), 자영업(4), 비경활·무급종사자(5) | |

6) 이중차이(Double Difference; DD)분석

(1) 단순평균이중차이

본 연구는 성향매칭을 통해 구해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해 이중차이(DD)를 적용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주지하듯이, DD는 기본적으로 동일항목에 대해 처리를 전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공히 반복측정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관찰된 결과에 대비해 시간이 지난 후 변화된 결과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비교하는 것이다.

단순평균이중차이는 비교를 함에 있어 집단 간 기댓값의 차이, 곧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D = E(Y_{t=1}^T - Y_{t=0}^T | T_{t=1} = 1) - E(Y_{t=1}^C - Y_{t=0}^C | T_{t=1} = 0)$$

여기서 t 는 시점을 나타내며, $t=0$ 은 프로그램 수급 전, $t=1$ 은 수급 후를 각각 나타낸다. T 는 실험집단 여부로 $T=1$ 은 실험집단, $T=0$ 은 비교집단이다. 그리고 Y^T 와 Y^C 는 각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성과측정치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복지인식의 변화는 노인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서비스를 받기 전과 서비스를 받은 후의 복지인식 차이에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복지인식 전후의 차이를 뺀 만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DD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와 내생성(endogeneity)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간구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PSM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실험집단을 재분류한 작업이 그러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 다만,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time invariant)고 본 연구는 가정하였다.

(2) 회귀분석모형

한편, PSM을 활용해 구해진 DD라 할지라도 관찰된 변수(여기서는 통제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Chen, Mu, and Ravallion(2008)의 논의에 기초한 다음의 회귀분석모형이 많이 활용된다.

$$Y_{it} = \alpha + \beta T_{it}t + \rho T_{it} + \gamma t + \sum_{j=1}^n \delta_j X_{j_{it}} + \varepsilon_{it}$$

위에서 T 는 실험집단과 비실험집단을 구별하는 처리변수(treatment variable)이며, t 는 시점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그리고 $T_{it}t$ 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variable)으로써, 궁극적으로 DD를 대변한다. 따라서 회귀계수 $\beta = 0$ 에 대한 검증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X_j 는 통제변수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귀모형을 통해 구해진 DD추정치가 정확하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오차항과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 간에 상관성이 없어야 한다. 이를 소위 ‘평행추세 가정(parallel-trend assumption)’이라 하는데, 이는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특성들이 처리상황과 관련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행추세를 가정하고,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4. 분석결과

1) PSM 추정결과

본 연구의 핵심 연구주제인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이 절에서는 PSM결과를 잠시 다루고자 한다. 분석전략에서도 언급했듯이, PSM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가능한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관찰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프로그램 이용확률을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프로그램 이용여부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의 경우 노인복지서비스 수급여부에 대한 추정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들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강조되었던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들로 구성된 프로빗모형이 추정되었다.

추정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되었다.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노인복지서비스의 신규이용에 대한 분석모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신규이용에는 선행요인인 교육수준과 욕구요인인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와 건강이 나쁜 경우에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에 대한 분석모형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에 더해 가능성 요인 중 동거여부도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이 계속이용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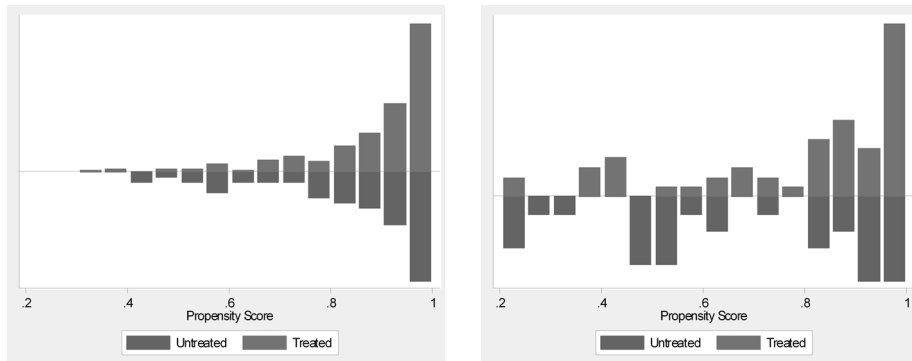
[표 3]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프로빗(probit)모형 추정결과

| | |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 | | |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 | | |
|-----------------|-------|--------------|-----|-----------------------|--------------|---|-----------------------|
| | | Coef. | | Std. Err. (robust) | Coef. | | Std. Err. (robust) |
| 성별(여) | | 0.179 | | 0.224 | -0.242 | | 0.464 |
| 연령 | | -0.018 | | 0.012 | -0.024 | | 0.019 |
| 교육수준 (초졸 이하) | 중·고등 | -1.201 | *** | 0.369 | -1.257 | * | 0.635 |
| | 대학 이상 | -1.061 | * | 0.416 | -1.877 | * | 0.915 |
| 시장소득(로그) | | 0.153 | | 0.108 | -0.233 | | 0.155 |
| 혼인여부 | | 0.183 | | 0.380 | -0.209 | | 0.518 |
| 동거여부 | | -0.055 | | 0.236 | 0.557 | ÷ | 0.327 |
| 지역 (서울) | 광역시 | 0.161 | | 0.354 | 0.184 | | 0.623 |
| | 시 | 0.529 | | 0.327 | 0.688 | | 0.656 |
| | 군 | -0.300 | | 0.541 | 0.564 | | 0.618 |
| | 도농복합 | -0.227 | | 0.508 | -0.091 | | 0.902 |
| 건강상태 | | -0.254 | ÷ | 0.137 | -0.483 | * | 0.206 |
| 절편 | | 2.500 | ÷ | 1.451 | 4.901 | * | 1.988 |
| Wald χ^2 | | 36.27*** | | | 33.37*** | | |
| Pseudo R^2 | | 0.180 | | | 0.441 | | |
| N | | 310 | | | 89 | | |

÷ p<.1, * p<.05, ** p<.01, *** p<.001

한편, PSM 추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무작위여야 한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이에 아래 [그림 1]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배열된 사례들을 성향점수에 따라 빈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의 경우 성향점수별로 실험집단(treated)과 비교집단(untreated)의 분포는 유사한 모양을 그린다. 그에 비해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의 경우는 점수별로 뚜렷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구간별로 보면 두 집단 간 분포의 양상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을 통해 위의 가정이 어느 정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성향점수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빈도 비교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

여기서는 PSM 이후에 새롭게 설정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반적인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 4]는 두 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반적 특성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구성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으며, 주로 70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력별로는 초졸이하의 저학력에서 이용비율이 높고,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비경활인구이다. 이들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다,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과 영남지방의 비율이 높은 반면, 충청과 강원, 그리고 호남 지역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두 실험집단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신규이용에 비해 계속이용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 또한 더 높다. 이와 달리 학력은 상대적으로 더 낮으며, 비경활의 비율은 더욱 높다. 특히, 두 실험집단간의 소득격차는 3배가 넘는다. 마찬가지로 건강상태도 계속이용자들 집단에서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분포는 신규이용자들과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노인들이 노인복지서비스를 더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PSM 이후 재설정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반적 특성

| 변수 | |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 | | |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 | | |
|----------|-----------|--------------|-------------|--------------|--------------|------------|------------|
| | | 전체 | 실험집단 | 비교집단 | 전체 | 실험집단 | 비교집단 |
| 성별 | 여성 | 265(56.38%) | 225(57.69%) | 40(50.00%) | 89(64.96%) | 61(64.21%) | 28(66.67%) |
| 연령 | 60~69 | 123(26.17%) | 103(26.17%) | 20(25.00%) | 22(16.06%) | 11(11.58%) | 11(26.19%) |
| | 70~79 | 298(63.40%) | 244(62.56%) | 54(67.50%) | 77(56.20%) | 51(53.68%) | 26(61.90%) |
| | 80 이상 | 49(10.43%) | 43(10.43%) | 6(7.50%) | 38(27.74%) | 33(34.74%) | 5(11.90%) |
| | 평균 | 72.75±4.86 | 72.81±4.95 | 72.44±(4.41) | 75.93±6.19 | 77.13±6.25 | 73.24±5.19 |
| 교육 수준 | 초졸 이하 | 307(65.32%) | 272(69.74%) | 35(43.75%) | 109(79.56%) | 82(86.32%) | 27(64.29%) |
| | 중·고등 | 125(26.60%) | 95(24.36%) | 30(37.50%) | 24(17.52%) | 11(11.58%) | 13(30.95%) |
| | 대학 이상 | 38(8.09%) | 23(5.90%) | 15(18.75%) | 4(2.92%) | 2(2.11%) | 2(4.76%) |
| | 평균 | 5.93±4.84 | 5.49±4.55 | 8.07±5.61 | 4.58±4.27 | 4.06±3.90 | 5.74±4.86 |
| 고용 지위 | 상용직 | 8(1.70%) | 7(1.79%) | 1(1.25%) | 1(0.73%) | 0(0.00%) | 1(2.38%) |
| | 임시·일용직 | 34(7.23%) | 33(8.46%) | 1(1.25%) | 6(4.38%) | 5(5.26%) | 1(2.38%) |
| | 자영업 | 114(24.26) | 103(26.41%) | 11(13.75%) | 18(13.14%) | 10(10.53%) | 8(19.05%) |
| | 비경활 등 | 314(66.81%) | 247(63.33%) | 67(83.75%) | 112(81.75%) | 80(84.21%) | 32(76.19%) |
| 소득(시장소득) | | 1,485±1,848 | 1,554±1,980 | 1,150±911 | 494±527 | 389±424 | 732±652 |
| 건강 상태 | 매우나쁨 | 20(4.26%) | 15(3.85%) | 5(6.25%) | 13(9.63%) | 10(10.75%) | 3(7.14%) |
| | 나쁨 | 194(41.28%) | 166(42.56%) | 28(35.00%) | 65(48.15%) | 50(53.76%) | 15(35.71%) |
| | 보통 | 124(26.38%) | 103(26.41%) | 21(26.25%) | 29(21.48%) | 15(16.13%) | 14(33.33%) |
| | 좋음 | 118(25.11%) | 96(24.62%) | 22(27.50%) | 28(20.74%) | 18(19.35%) | 10(23.81%) |
| | 매우좋음 | 14(2.98%) | 10(2.56%) | 4(5.00%) | - | - | - |
| 지역 | 서울 | 70(14.89%) | 50(12.82%) | 20(25.00%) | 8(5.84%) | 6(6.32%) | 2(4.76%) |
| | 수도권 | 92(19.57%) | 73(18.72%) | 19(23.75%) | 32(23.36%) | 20(21.05%) | 12(28.57%) |
| | 부산·경남·울산 | 85(18.09%) | 68(17.44%) | 17(21.25%) | 10(7.30%) | 7(7.37%) | 3(7.14%) |
| | 대구·경북 | 93(19.79%) | 82(21.03%) | 11(13.75%) | 19(13.87%) | 10(10.53%) | 9(21.43%) |
| | 대전·충남 | 32(6.81%) | 28(7.18%) | 4(5.00%) | 14(10.22%) | 8(8.42%) | 6(14.29%) |
| | 강원·충북 | 45(9.57%) | 43(11.03%) | 2(2.50%) | 8(5.84%) | 8(8.42%) | 0(0.00%) |
| | 광주·전남북·제주 | 53(11.28%) | 46(11.79%) | 7(8.75%) | 46(33.58%) | 36(37.89%) | 10(23.89%) |
| 복지 인식 | 정부역할 | 3.72±0.74 | 3.73±0.73 | 3.65±0.82 | 3.80±0.68 | 3.88±0.60 | 3.62±0.82 |
| | 정책평가 | 3.40±0.87 | 3.45±0.86 | 3.18±0.91 | 3.50±0.81 | 3.56±0.80 | 3.38±0.85 |
| | 소득격차 해소 | 3.69±0.98 | 3.68±0.97 | 3.72±1.04 | 3.61±0.97 | 3.62±0.92 | 3.60±1.08 |
| | 성장 vs. 분배 | 2.43±0.78 | 2.45±0.77 | 2.36±0.83 | 2.51±0.79 | 2.61±0.75 | 2.29±0.83 |
| N | | 470 | 390 | 80 | 137 | 95 | 42 |

한편, 복지인식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 또한 소득격차해소가 정부책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며, 성장보다 분배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복지인식 역시도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값을 보인다.

2) 단순이중차이 분석 결과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자. [표 5]와 [표 6]은 단순평균이중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우선 신규이용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정부역할에 대한 복지인식을 비롯해 정책평가, 소득격차해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비교집단은 3.92에서 3.14로 낮아진 반면, 실험집단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거시적 변화⁵⁾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지만, 노인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의 의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소의 정치’에서 강조하듯이,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지출 축소를 반대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실험집단에서 더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실험집단의 변화수준(+0.35)은 비교집단의 변화수준(+0.72)보다 미약하다. 이는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오히려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정책을 부정적이게 만드는 형국이며,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에 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교집단에 속한 노인들의

⁵⁾ 여기서 측정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복지인식의 변화는 거시적 변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간주하기로 한다. 예컨대, 복지인식이 경제상황이나 분배상황 등에 따라 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김사현(2010a)을 참조하라.

정책평가가 왜 이 시기동안 급격하게 높아졌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는 이 현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⁶⁾. 다만,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의 변화정도가 실험 집단에서 적다는 것 자체는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불만이 반영된 것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수급경험이 정부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며, 그것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져 정부정책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5]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에 따른 복지인식 이종차이 분석(양방검증)

| | | $Y_{t=0}(n)$ | $Y_{t=1}(n)$ | $Y_{t=1} - Y_{t=0} / t(p\text{-value})$ |
|-----------------|---------------------------------|-------------------|-------------------|---|
| 정부 역할 | 실험집단(Y^T) | 3.72±0.77(184) | 3.74±0.68(199) | 0.02/ 0.21(.832) |
| | 비교집단(Y^C) | 3.92±0.66(51) | 3.14±0.85(28) | -0.78/ -4.21(.000) |
| | $Y^T - Y^C / t(p\text{-value})$ | -0.20/1.83(.070) | 0.60/3.56(.001) | 0.80/ 3.51(.000) |
| 정책 평가 | 실험집단(Y^T) | 3.27±0.92(187) | 3.62±0.76(201) | 0.35/ 4.07(.000) |
| | 비교집단(Y^C) | 2.92±0.95(52) | 3.64±0.62(28) | 0.72/ 4.09(.000) |
| | $Y^T - Y^C / t(p\text{-value})$ | 0.34/2.34(.022) | -0.03/-0.20(.842) | -0.37/ -1.87(.062) |
| 소득 격차 해소 | 실험집단(Y^T) | 3.82±0.98(177) | 3.56±0.94(201) | -0.27/ -2.70(.007) |
| | 비교집단(Y^C) | 3.94±0.93(51) | 3.32±1.12(28) | -0.62/ -2.49(.016) |
| | $Y^T - Y^C / t(p\text{-value})$ | -0.12/-0.78(.438) | 0.24/1.06(.297) | 0.35/ 1.91(.057) |
| 성장 vs. 분배 | 실험집단(Y^T) | 2.43±0.78(185) | 2.47±0.77(201) | 0.04/ 0.52(.606) |
| | 비교집단(Y^C) | 2.42±0.85(52) | 2.25±0.80(28) | -0.17/ -0.90(.370) |
| | $Y^T - Y^C / t(p\text{-value})$ | 0.01/0.03(.976) | 0.22/1.36(.184) | 0.21/ 0.38(.706) |

한편,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정책의 일반적 목적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설문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먼저 소득격차해소가 정부책임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사후측정에서 동의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감소폭은 비교집단이 -0.62인 것에 반해, 실험집단은 -0.27에 그치고 있으며, 이 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는 노인

⁶⁾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이 시기동안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가 노인 전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좋게 만들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보수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노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능한 이유들 중 어떤 것이 자료에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것이다.

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비동의 경향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장 vs. 분배에 대한 인식의 경우, 비교집단은 사후측정에서 성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다소 옮겨갔지만(2.42 → 2.25), 수급경험자들은 여전히 무게중심을 사전과 비슷하게 유지(2.43 → 2.47)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즉, 노인복지서비스를 수급한 경험이 성장이나 분배냐라는 인식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장 vs. 분배에 대한 인식이 다소 이데올로기적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이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 변화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성장 vs. 분배에 대한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자들의 복지인식에 대한 이중차이 분석결과를 확인해 보자. 이 경우 역시,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정부역할에 대한 복지인식을 비롯해 정책평가, 소득격차해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동의수준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소폭은 비교집단이 -0.70인 것에 반해, 실험집단은 -0.23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계속이용자의 경우도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6]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에 따른 복지인식 이중차이 분석(양방검증)

| | | $Y_{t=0}(n)$ | $Y_{t=1}(n)$ | $Y_{t=1} - Y_{t=0} / t(p\text{-value})$ |
|-----------------|---------------------------------|-------------------|-------------------|---|
| 정부 역할 | 실험집단(Y^T) | 4.00±0.69(47) | 3.77±0.47(48) | -0.23/ -1.88(.063) |
| | 비교집단(Y^C) | 3.88±0.65(26) | 3.19±0.91(16) | -0.70/ -2.67(.013) |
| | $Y^T - Y^C / t(p\text{-value})$ | 0.12/0.71(.482) | 0.58/2.45(.024) | 0.47/ 2.54(.014) |
| 정책 평가 | 실험집단(Y^T) | 3.47±0.95(47) | 3.65±0.60(48) | 0.18/ 1.09(.281) |
| | 비교집단(Y^C) | 3.15±0.88(26) | 3.75±0.68(16) | 0.60/ 2.45(.019) |
| | $Y^T - Y^C / t(p\text{-value})$ | 0.31/1.42(.162) | -0.10/-0.54(.591) | -0.42/ -2.82(.007) |
| 소득 격차 해소 | 실험집단(Y^T) | 3.61±0.89(44) | 3.63±0.96(48) | 0.01/ 0.06(.953) |
| | 비교집단(Y^C) | 3.92±0.93(24) | 3.13±1.15(16) | -0.79/ -2.30(.029) |
| | $Y^T - Y^C / t(p\text{-value})$ | -0.30/-1.30(.199) | 0.50/1.57(0.130) | 0.80/ 3.31(.002) |
| 성장 vs. 분배 | 실험집단(Y^T) | 2.45±0.65(47) | 2.77±0.81(48) | 0.32/ 2.16(.034) |
| | 비교집단(Y^C) | 2.35±0.85(26) | 2.19±0.80(16) | -0.16/ -0.60(.556) |
| | $Y^T - Y^C / t(p\text{-value})$ | 0.10/0.53(.601) | 0.58/2.44(.022) | 0.48/ 1.05(.297) |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신규이용인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실험집단의 변화수준(+0.18)은 비교집단의 변화수준(+0.60)보다 미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도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수급의 경험이 복지정책의 일반적 목적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설문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먼저 소득격차해소가 정부 책임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비교집단은 사후측정에서 동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실험집단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비동의 경향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장 vs. 분배에 대한 인식의 경우는 앞의 신규이용자에 대한 분석결과와 결론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만,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이 경우 실험집단은 최근 분배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이다. 이와 달리 비교집단은 성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사후측정에서는 이 두 집단 간에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볼 때, 복지제도의 장기적인 수급이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최종적인 이중차이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여전히 노인복지서비스 수급이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시키기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3) 회귀분석모형의 결과

분석전략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평균이중차이는 관찰된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이 통제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회귀분석모형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이에 아래에서는 회귀분석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단순평균이중차이의 결과를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7]은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경험이 여러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7]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회귀모형)

|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 | | 모형 1 | | 모형 2 | | 모형 3 | | 모형 4 | |
|-----------------|--------------|-------------------|-----|-------------------|-----|-------------------|-----|-------------------|-----|
| | | 정부역할 | | 정책평가 | | 소득격차해소 | | 성장 vs. 분배 | |
| 연도 | | -0.790 (0.172) | *** | 0.807 (0.198) | *** | -0.625 (0.245) | * | -0.104 (0.214) | |
| 실험집단 | | -0.154 (0.128) | | 0.264 (0.137) | ÷ | -0.142 (0.134) | | 0.004 (0.174) | |
| 수급효과 | | 0.830 (0.201) | *** | -0.480 (0.224) | * | 0.383 (0.256) | | 0.162 (0.239) | |
| 성별(여성) | | 0.051 (0.097) | | 0.132 (0.097) | | 0.041 (0.117) | | 0.121 (0.079) | |
| 연령 | | 0.004 (0.008) | | 0.010 (0.007) | | -0.008 (0.009) | | -0.001 (0.008) | |
| 교육 | 중·고등학교 | 0.007 (0.088) | | -0.058 (0.092) | | -0.006 (0.110) | | -0.159 (0.104) | |
| | 대학 이상 | 0.079 (0.124) | | -0.450 (0.148) | ** | -0.018 (0.228) | | -0.167 (0.124) | |
| 시장소득(로그) | | -0.073 (0.037) | * | -0.023 (0.042) | | -0.030 (0.045) | | -0.061 (0.033) | ÷ |
| 고용 | 임시·일용직 | -0.644 (0.278) | * | -0.171 (0.284) | | 0.250 (0.473) | | -0.470 (0.294) | |
| | 자영업 | -0.453 (0.240) | ÷ | -0.122 (0.273) | | 0.242 (0.513) | | -0.302 (0.286) | |
| | 비경활 등 | -0.526 (0.217) | * | -0.223 (0.251) | | 0.188 (0.505) | | -0.391 (0.271) | |
| 지역 | 수도권 | -0.088 (0.143) | | -0.049 (0.135) | | -0.431 (0.155) | ** | -0.295 (0.126) | * |
| | 부산·경남· 울산 | -0.346 (0.135) | ** | 0.057 (0.140) | | -0.544 (0.146) | *** | -0.210 (0.106) | * |
| | 대구·경북 | -0.153 (0.137) | | 0.107 (0.154) | | -0.163 (0.150) | | -0.178 (0.116) | |
| | 대전·충남 | -0.173 (0.147) | | 0.024 (0.210) | | -0.517 (0.191) | ** | -0.441 (0.153) | * |
| | 강원·충북 | -0.369 (0.188) | * | 0.202 (0.186) | | -0.059 (0.183) | | -0.230 (0.161) | |
| 광주·전남북·제주 | | -0.334 (0.156) | * | 0.146 (0.169) | | -0.436 (0.202) | * | -0.272 (0.109) | * |
| 절편 | | 4.722 (0.741) | *** | 2.501 (0.736) | *** | 4.793 (0.889) | *** | 3.491 (0.645) | *** |
| Wald χ^2 | | 105.79*** | | 69.21*** | | 84.66*** | | 39.5** | |
| R^2 | | .089 | | .123 | | .079 | | .046 | |
| N | | 462 | | 468 | | 457 | | 466 | |

÷ p<.1, * p<.05, ** p<.01, *** p<.001

표를 보면, 노인복지서비스를 수급한 경험이 그들의 복지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음영부분 참조).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지출과 관련해(모형 1),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은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부평가와 관련해(모형 2), 수급경험은 부정적인 정책평가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단순평균이중차이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이와 달리 소득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책임과 관련해(모형 3), 노인복지서비스 신규 수급경험이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수급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노인복지관련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만, 일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특정한 복지제도의 단기적 수급경험이 관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복지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시키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성장 vs. 분배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성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모형 4 참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라는 것이 쉽게 변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복지인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vs. 분배에 대한 인식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된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아래 [표 8]은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앞서 단순평균이중차이의 분석결과와 다르지 않다. 즉, 노인복지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수급한 경우 복지인식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수급은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모형 5), 또한 부정적인 정책평가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모형 6). 이는 앞서 노인복지서비스 신규이용자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같은 것이다.

[표 8]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회귀모형)

| 노인복지서비스 계속이용 | | 모형 5 | | 모형 6 | | 모형 7 | | 모형 8 | |
|-----------------|---------------|-------------------|-----|-------------------|-----|-------------------|-----|-------------------|-----|
| | | 정부역할 | | 정책평가 | | 소득격차해소 | | 성장 vs. 분배 | |
| 연도 | | -0.734 (0.213) | *** | 0.783 (0.202) | *** | -0.896 (0.273) | ** | -0.023 (0.305) | |
| 실험집단 | | 0.172 (0.161) | | 0.107 (0.158) | | -0.255 (0.226) | | -0.001 (0.183) | |
| 수급효과 | | 0.482 (0.228) | * | -0.592 (0.265) | * | 1.012 (0.336) | ** | 0.357 (0.344) | |
| 성별(여성) | | -0.037 (0.137) | | 0.276 (0.189) | | -0.446 (0.203) | * | -0.234 (0.179) | |
| 연령 | | -0.010 (0.011) | | 0.016 (0.014) | | -0.046 (0.014) | ** | 0.003 (0.010) | |
| 교육 | 중·고등학교 | -0.220 (0.173) | | -0.552 (0.207) | ** | 0.020 (0.220) | | -0.118 (0.171) | |
| | 대학 이상 | 0.000 (0.196) | | -0.526 (0.355) | | -0.258 (0.387) | | -0.737 (0.405) | ÷ |
| 시장소득(로그) | | 0.068 (0.034) | * | -0.082 (0.046) | ÷ | 0.055 (0.060) | | -0.030 (0.042) | |
| 고용 | 임시·일용직 | 0.912 (0.371) | * | 0.792 (0.441) | ÷ | 0.200 (0.640) | | -0.452 (0.417) | |
| | 자영업 | 1.387 (0.205) | *** | 0.295 (0.278) | | 0.320 (0.363) | | -0.735 (0.376) | ÷ |
| | 비경활 등 | 1.402 (0.226) | *** | 0.176 (0.245) | | 0.487 (0.344) | | -0.698 (0.398) | ÷ |
| 지역 | 수도권 | -0.531 (0.377) | | 0.137 (0.311) | | -0.618 (0.341) | ÷ | -0.219 (0.273) | |
| | 부산·경남·울산 | -0.920 (0.430) | * | 0.322 (0.449) | | -1.039 (0.532) | ÷ | 0.211 (0.488) | |
| | 대구·경북 | -0.085 (0.376) | | 0.525 (0.370) | | -0.632 (0.521) | | -0.327 (0.330) | |
| | 대전·충남 | -0.363 (0.404) | | 0.172 (0.294) | | -0.837 (0.384) | * | -0.322 (0.306) | |
| | 강원·충북 | -0.659 (0.426) | * | 0.493 (0.378) | | -0.513 (0.459) | | -0.071 (0.338) | |
| | 광주·전남북· 제주 | -0.188 (0.407) | * | 0.259 (0.366) | | -0.388 (0.343) | | -0.027 (0.288) | |
| 절편 | | 3.319 (0.853) | *** | 1.980 (1.058) | ÷ | 7.434 (1.044) | *** | 3.303 (0.789) | *** |
| Wald χ^2 | | 869.44 | *** | 360.60 | *** | 93.02 | *** | 129.18 | *** |
| R^2 | | .326 | | .249 | | .194 | | .164 | |
| N | | 137 | | 137 | | 132 | | 137 | |

÷ p<.1, * p<.05, ** p<.01, *** p<.001

그러나 노인복지서비스의 단기적 이용경험과 달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득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모형 7). 이는 장기적인 복지제도의 수급경험이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인식까지도 변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일 수 있다. 이론적 논의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수급과정에서 복지정책의 목적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고, 그것이 규범으로 내면화되면서 일반적인 인식도 변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석의 결과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급경험도 성장 vs. 분배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성향까지 변화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모형 8)⁷⁾.

5. 정리 및 논의

본 연구는 제도주의 관점에서 복지제도의 수급경험이 복지정책에 대한 수급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특정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목적에 관련된 복지인식과 일반적인 목적에 관련한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장·단기적 수급경험을 기초로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은 일차적으로 노인복지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기간과 무관하게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다만, 복지인식의 설문주제에 따라 수급효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의 경우 수급효과는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복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의 경우 수급효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경험이 한국 복지정책의 미약함을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었다.

둘째, 복지정책의 일반적 목적과 관련해 수급경험의 기간은 의미가 있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단기적 이용자들이 실험집단으로 설정된 경우, 정부의 소득격차해소 책임과 관련해 수급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장기이용자들이 실험집단인 경우

⁷⁾ 물론, 연구에서 다루어진 기간보다 수급이 더 장기화될 경우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

수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기간이 긴 경우 복지정책의 일반적 목적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수급기간이 길다하여 성장 및 분배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한 의식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거시적 변화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분석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분석의 결과는 제도주의 이론, 특히 복지수혜론이 한국사회에서도 현실 적합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사실 복지수혜론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강한 경험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존연구들에서는 ‘시기상조(時機尙早)’설, 즉 복지제도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경험적 지지를 받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설명이 강조되기도 한다(주은선·백정미, 2007; 김사현·홍경준, 2010). 하지만, 서론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이는 분석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한편, 기존연구들에서 복지수혜론은 자기이해적 관점에서만 설명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만으로 복지정책의 직접적인 정책목표가 아닌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사람들의 복지인식을 설명하기란 이론적으로 다소 한계가 있다. 오히려 Pierson(2006)을 비롯한 여러 제도주의 이론가들이 강조한 것처럼, 제도를 통해 초래되는 사회적 학습이나 규범으로 복지수혜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과 이론적 연구가 앞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복지인식의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탐색하는 작업이 현시점에서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사회는 복지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정부지출증가에 대한 지지 수준은 최근 감소하였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변화였다. 따라서 이러한 두 변화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예상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분석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후속연구들이 좀 더 풍부한 함의를 가진 연구성과들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사현 (2010a).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0b).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 *사회복지연구*, 41(3), 213-239.
- 김사현, 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 김연명, 이승욱 (역) (1990).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I. Gough의 *The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state(1979)*.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영순, 여유진 (2008). 한국인의 복지태도: 탈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여유진 외.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박시중 (역) (2006).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레이건, 대처, 그리고 축소의 정치. P. Pierson의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1994)*.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 안상훈 (2000).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복지학*, 43, 193-221.
- 이한나, 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 임연옥, 윤현숙 (2009).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서울과 춘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3), 1063-1085.
- 주은선, 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Andersen, R. M. & J. F. Newman (1973).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Health and Society*, 51(1), 95-124.
- Bean, C. & E. Papadakis (1998). A comparison of mas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in different institutional regimes, 1985-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3), 211-236.
- Chen, S., R. Mu & M. Ravallion (2008). Are there lasting impacts of aid to poor are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 512-528.

- Coughlin, R. M. (1980). *Ideology, public opinion & welfare poli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uo, S. & M. W. Fraser (2010). *Propensity score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SAGE.
- Hasenfeld, Y. & J. A. Rafferty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1027-1048.
- Jæger, M. M. (2006). What makes people support public responsibility for welfare provision: self-interest or political ideology?: a longitudinal approach. *Acta Sociologica*, *49*(3), 321-338.
- Khandker, S. R., G. B. Koolwal & H. A. Samad (2010). *Handbook on impact evaluation: quantitative methods and practices*. The World Bank.
-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O'Connor, J. (1973).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 Olsen, J. M. & M. P. Zanna (1993).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in Psychology*, *44*, 117-154.
- Papadakis, E. (1992). Public opinion, public polic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Studies*, *15*, 21-37.
- Pierson, P. (1996).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8*(2), 143-179.
- Rokeach, M. (1970). *Belief, attitude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3), 283-304.
- Svallfors, S. (2006). *The moral economy of class: class and attitud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aylor-Gooby, P. (1985). *Public opinion, ideology and state welfa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Wilensky, H. L.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he experience effect of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on welfare perception: Double difference analysi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Kim, SaHyu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experience of social welfare service affects the perception of welfare policy in the sense of institutional perspective. Especially,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change of perception in welfare clients towards the program-specific goal and the general goal of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 order to do so, the double difference analysi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is used.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social welfare service changes the clients' perception. The perception on the general goal, however, is changed by long term experience of the service. This result displays the feasibility of institutional theory, especially welfare clientele within Korea. It also raises the need to consider the change of welfare perception not only in the aspect of institutional interest, but also in the aspect of the effect of social learning.

Key words: welfare perception, welfare attitude,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stitutional perspective, program-specific goal, general goal, double difference, propensity score method.

◆ 2011.11.11. 접수 / 2011.12.16. 1차 수정 / 2012.02.11. 게재 확정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sahyun@daegu.ac.kr)